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 안보정책의 제약과 기회 고찰: 북한의 NPT가입 및 탈퇴 시기(1989-1993) 사례 1)

박홍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히만호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일본의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본은 초기(1989-1991)에는 협력적이던 것이 점점 변하여 후기(1992-1993)에는 경직화되면서 공세적으로 변했다. 그 배경에는 미일관계의 새로운 위상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위상변화란 미일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표명이며 일본 스스로가 “지역안정을 위해 적극적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표명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은 정치와 군사문제의 분리해석이며 이는 미일간 역할분담을 의미했다. 미국은 미군 주둔을 통해 군사적 안전보장 역할을, 일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외교를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외교는 제약에서 기회로의 전이를 시도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일본은 핵문제를 당사국 문제(국교 정상화와 상호사찰, 남북경협과 핵문제)와 링크시켜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앞으로 미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기대한 이상 그에 상응한 일본의 영향력도 증대할 것이다.

본 논문의 고찰대상 시기보다는 앞선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질서를 주도해 왔고 일본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기술 및 자본협조) 후원을 통한 KEDO를 둘러싼 한미일 역할분담을 해오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는 단서일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견인 역할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여하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그만큼 발언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만들기라는 것이다.

◆ 주제어: 일본, 북한, 핵, NPT, 탈냉전

1. 문제제기 및 검토과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래 “무임승차론”, “기회와 의지”, “최소주의”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¹⁾ 그 이후 탈냉전기를 맞아 일본 안보외

* 이 논문은 2000년도 경북대학교 Post-Doc. 연수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연구지원의 기회를 마련해 준 지도교수 및 대학 당국에 대해 사의를 표함.

** 주저자

교 정책은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를 “군사적 현실주의의 확대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일본 내부 움직임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²⁾ 이 글은 탈냉전기 일본 안보외교 정책 변화가 미일(美日)관계의 위상변화에 기인함을 지적하면서 사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핵문제(이하 북핵문제)를 계기로 일본 안보정책이 “제약에서 기회”로 전이했음을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제약은 일본의 군사안보 문제(그 가운데 특히 북핵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일동맹으로 인해 대미 의존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관계(미일동맹)가 일본의 독자성 발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란 이러한 제약을 타파하지 않으면서 특히 냉전후 일본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정치외교적 독자성을 발휘하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 안보정책의 제약과 기회가 북한의 NPT 가입에서 탈퇴 시기(1989-1993)에 극명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미일관계 위상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장차 일본에게 어떤 기회로서 작동할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³⁾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고 NPT를 탈퇴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NPT에 가입한 이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⁴⁾의 안전조치협정⁵⁾에 조인하지 않았기에 핵의혹을 받아 왔다. 그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韓美日)으로부터 조인요청을 받게 된다. 이 협정에 조인하고 나서 북핵문제는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북한은 NPT 탈퇴를 선택함으로써 상황

1)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최운도(2000: 89-126)의 저서 참조.

2) 군사적 현실주의의 확산과정에 대해서는 진창수(1999a: 15-43)의 저서를, 일본 내부 움직임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면우(1999: 45-78)의 저서를, 반면 일본 국내의 안보여론은 냉전기·탈냉전기 변화없이 이른바 안보문화의 연속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이숙중(1999: 79-134)의 저서를 참조.

3) 1965년 제안, 1968년 조약 조인, 1970년 발효. 핵무기국 5개국에게는 핵군축을 요구하는 한편, 비핵무기국에게는 핵무기의 제조 및 취득을 금지하고 IAEA 사찰을 의무화한 조약. 일본 외무성은 핵불확산 조약으로 부른다. 일본의 NPT 조인은 1970년 2월, 비준은 1976년 6월이었다. 비준까지 6년여가 걸린 것은 비핵보유국의 지위에 놓인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핵에 대해 자유로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이 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미키(三木) 내각은, 미국의 핵 우산을 중심으로 한 미일 안보체제의 견지 재확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낸 다음 이에 비준했다. 일본 가입 때에도 지적된 NPT의 불평등성은 인도 등 비동맹 유력국을 NPT 범위 밖으로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범위 밖의 각 국들이 핵확산 운상이 되어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7년에 창설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기구. NPT 제정 후 동 조약에 근거해 사찰 임무도 부여되었다.

5) NPT 기능을 유효하게 하는 장치로 IAEA가 만든 사찰협정. 자주적 신고를 전제로 비핵무기국의 모든 핵물질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다. 일명 153 협정. 일본은 보장조치협정으로 부름.

은 급변했다.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전략의 일환이며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2국간 문제이다. 북핵문제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안정이라는 지역적 관점과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는 미국과 일본(美日)의 세계전략과 지역전략이 겹쳐지는 문제였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지역전략 사이에 정합성이 없을 경우 미일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일본에게 제약요인임과 동시에 기회요인임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이 글은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관련 기존연구로는 다수의 역작이 있고⁶⁾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편의 선행연구가 있다.⁷⁾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술에 관한 연구도 많다⁸⁾.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관점은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첫째 이유는 일본 관점이 미국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거나 부차적인 사안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군사문제이며 북미(北美)간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의 관점을 처음부터 소홀히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임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본 논문의 의의가 될 것이다. 본 논문 작성에는 일본 국회의사록을 기초자료로 삼았고 역사적 기술과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을 기본자료로 삼았다.

II. 북핵의혹 부상과 일본의 대응

1. 북핵문제의 부상: 제약 하에서 관망하는 일본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관해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예컨대 베이징(北京)과 평양에 근무하는 서방측의 외교관, 그리고 북한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 정부 등과 의견교환을 하여 정보입수에 노력해 왔다고 한다.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공개된 자료

6) 예를 들어 이춘근(1995), 정옥남(1995), 김재복(1995), Michael J. Mazarr(1995), Don Oberdofner(1997), C. Kenneth Quinones(2000)의 저서 등이다.

7) Chuck Downs(1999); Leon V. Sigal(1997)의 저서로, 다운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즐겨 막판외교(Brinkmanship)를 이용하여 온 것이 된다. 반면 시걸의 견해로는 미국에게 협력 혹은 협력을 위한 위협의 자제(Cooperative Threat Reduction)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북한은 그러한 상황에서 막판외교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8)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허만호(1996: 179-215)는 북한의 협상행위가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체계성과 일관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후속 연구를 종합정리한 연구로, 김용호(2000: 291-310)는 북한의 협상형태가 독특(unique)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구별되는(distinctive) 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분석과 북한의 라디오 및 신문을 전문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었다.⁹⁾ 이런 점에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 점은 또한 북한의 폐쇄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988년 들어와 북한이 소련(USSR)으로부터 새로운 병기를 도입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병기도입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이것이 직접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안정은 일본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¹⁰⁾ 즉 당시 일본은 북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정부간 직접 접촉도 바란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¹¹⁾ 또 하나의 문제인 북핵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1989년 11월 9일, 북한이 원자력발전 이외의 핵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음을 지적한 뒤, 혹시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일본으로서도 방치할 수 없기에 정부로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의심스러운 징후에 관해서는 (1)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IAEA와 사찰협정을 맺지 않았다는 것과 (2)평양 북부에 플루토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적했다(『朝日新聞』朝刊, 1989년 11월 10일 3면). 이 핵의혹은 1990년 2월 일본 토오카이(東海)대학 정보기술센터가 1986년 6월 11일과 1989년 9월 19일 스포트(SPOT)가 찍은 적외선 사진을 컴퓨터 분석한 바, 평양 북쪽 약 90 Km 지역 영변 강가에 원자력 발전소로 보여지는 시설이 건설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한 것과 이어 1990년 2월 모스크바(Moscow) 방송이 북한은 44만 Kw의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 중이라고 전한 것에 의해 더욱 부풀어 올랐다.¹²⁾ 그러나 당시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를 세계전략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미국에 의한 해결을 기대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방위백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지금까지 일본은 “미소와 지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미소에 의한 전쟁억지가 가능한 입장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단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과 안전보장체제를 다지고

9) 第109回, 日本國會, 參議院外交總合安全保障に關する調査會, 外交軍縮小委員會 會議錄第一號, 昭和六十二年九月四日, 七頁, 谷野政府委員. 이하 參議院, 參議院外交總合安全保障に關する調査會 109-1, p. 7 (谷野政府委員, 1987. 9. 4) 로 표기.

10) 衆議院, 內閣委員會 112-13, p.28 (谷野政府委員, 1988. 5. 24).

11) 衆議院, 外務委員會 114-2, p.3 (谷野政府委員, 1989. 4. 11). 同 114-3, p.14 (宇野外務大臣, 1989. 5. 24).

12) 정보기술센터의 사카타(坂田)소장은 1970년대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시험화로, 1980년대에는 독자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북한에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건데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고 남쪽에 위치한 건물은 연료시설, 북쪽 건물은 연구시설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朝日新聞』朝刊, 1990년 2월 9일 3면).

미국에 의한 억지효과로 안전보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다, 방위력 정비에 노력하여 미국과 협력관계 추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일본의 방위 기본정책을 세우고 있었다(『防衛白書』, 1988年版, pp.93-102). 나아가 당시 일본은 평화헌법 준수, 전수방위,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민간에 의한 군 통제를 확보하면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해왔고 절도 있는 방위력 정비를 국방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왔다.¹³⁾ 미일관계에 관해서도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방위면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의 촉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호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문맥으로 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防衛白書』, 1990年版, pp.111-113). 이러한 배경 하에 제기된 북핵문제는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일본은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은 IAEA의 보고 등에 따르면 북한에 연구용 원자로가 2기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 밖의 원자력 시설에 관해서는 확인이 안되었기에, 북한에 재처리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 등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 하루 빨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¹⁴⁾ IAEA에 의한 핵문제 처리를 관망하는 일본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 안보외교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질서(미일동맹)와 그에 의해 작동되는 IAEA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출현으로 일본은 현상유지(기존의 미일동맹과 비핵 3원칙 견지) 정책이 만능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다. 반면 국제적으로 탈냉전기 이기는 하였지만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소련)가 있는 한 미일동맹 관계는 일본 안보외교에 중요 사안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일본이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었다는 정부인식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¹⁵⁾

2. 북의 핵개발 카드: 제약 하에서의 일본의 관심

한편 미국은 정찰위성 관찰을 바탕으로 북한은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나 핵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사찰을 받아 들일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이에 미국은 일본측에 북일 관계정상화 협의를 진행시킬 때 핵사찰 요구를 의제의 1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요

13)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함. 국시로 견지해 왔음을 일본은 주장한다(『防衛白書』, 1990年版, pp.98-103 참조).

14) 衆議院, 外務委員會 118-7, p.32 (太田政府委員, 1990. 6. 1).

15) 이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발언들은 參議院, 予算委員會 118-7, p.25 (中山國務大臣, 1990. 6. 4). 衆議院, 外務委員會 118-9, p.19 (中山國務大臣, 1990. 6. 13). 衆議院, 外務委員會 118-12, p.11 (中山國務大臣, 1990. 6. 22) 참조.

청했다. 미국의 요청배경에는 미국에게는 북한이 사찰을 받게 할 유력한 수단이 없었기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그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로서도 북한에 제공되는 경제원조가 핵개발에 전용된다면 곤란하며, 핵무기의 유무는 한반도의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일본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외무성은 교섭의제로 거론할 방침이었다(『朝日新聞』朝刊, 1990年 10月 26日 3面).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동서냉전의 종결을 배경으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전환점을 맞게 되는 1990년 9월 초 평양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 여기에서 북한 부수상 겸 외무장관(김영남)은 소련 외무장관(세바르드나제)에게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 북한은 (1)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진행시킬 것이며, (2)일소(日蘇) 사이의 북방영토 문제에서도 일본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3)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음이 3개월이 지나서 밝혀졌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1月 1日 1面).

한소(韓蘇) 양국은 1990년 9월 30일 국교를 수립했다. 문제의 회담은 소련 외무장관이 도쿄(東京)에서의 일소 외무장관 정기협약에 출석하기 위하여 방일하는 도중 9월 2일부터 3일에 걸쳐서 북한에 들렀을 때 이루어진 것이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공표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9월 하순 일본의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 양당 대표단의 방북 뒤였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일본측은 모르는 상태였다. 북한이 표명한 핵개발은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련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당시 소련은 미일 뿐만 아니라 한중(韓中)과도 관계개선을 꾀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소련의 개방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국교교섭을 제안 받은 것은 일본에서 보면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전부터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문제로 한미일의 연계가 있었기에 일본에 대한 북한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원군(援軍)이었던 소련이 취한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북한은 고립감을 맛보게 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필요로 했고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였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소련에게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진행시키겠다고 전한 배경에는 한소 국교수립에 대한 북한의 쉼기이며 저항의 표현이기도 했다. 동시에 남북대화나 미일과의 관계개선 교섭을 북한이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도 핵개발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은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에서의 핵철거를 목표로 한국과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핵개발 카드를 유효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당시까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소련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 NPT 가입 자체도 그러했다(Andrew Mack, 1991: 87).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북한이

핵개발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은 북한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미소 협조가 현실이 되면서 이 시기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생존전략을 핵문제를 통해 모색했었다고도 보여진다.

3. 핵의혹 해소를 위한 다각외교: 제약 하에서의 일본의 노력

이런 흐름 가운데 1991년 1월부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된다.¹⁶⁾ 여기서는 그 경위를 면밀히 추적하지는 않고 쟁점이 된 문제 가운데 핵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선 두 번째의 관계 정상화교섭에서 문제해결의 순위가 ① 핵사찰 문제, ② 배상 혹은 청구권 문제, ③ 남북대화 재개문제로 정리되었다. 어느 것이나 아직 총론 단계였는데 교섭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다고 전해졌다.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었다.¹⁷⁾ 북한과의 교섭과 병행하여 일본은 소련과도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었다. 비밀사항이었기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련이 일본의 염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는 밝혀졌다.¹⁸⁾ 의견교환 내용은 소련이 북한에게 핵사찰을 받도록 설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본의 요청이었을 것이지만 이 정도였다면 비밀사항으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보다 높은 레벨의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소련의 영향력 행사로 북한이 핵사찰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소련에 대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세계 제1의 정부개발원조(ODA) 제공국이며 소련은 일본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1991년 3월 30일 ODA 실시에 즈음하여 피원조국이 NPT에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방침을 정했다.¹⁹⁾ 이 지침의 목적은 걸프전쟁을 계기로 제3세계의 핵확산 방지가 세계적인 과제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NPT 미가입국에 압력을 가하여 가입을 재촉하는 것이었다(『朝日新聞』夕刊, 1991年 3月 30日 1面). 시기적으로 이 때는 일본 ODA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핵문제는 북일교섭과 무관한 문제이며 이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16)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취급한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몇 편을 소개하면,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김봉진(1993: 109-144)의 저서, 한일 기본조약에 비추어 북일 관계개선을 전망한 이교덕(1995: 155-188)의 저서, 두-레벨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양기웅(1996: 141-188)의 저서 등이 있다. 상세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해서는 이들을 참조.

17) 衆議院, 外務委員會 120-7, pp.3-4 (谷野政府委員, 1991. 3. 13).

18) 衆議院, 外務委員會 120-11, p.17 (兵藤政府委員, 1991. 4. 24).

19) 이 방침은 외무성이 ODA 지침으로 정리한 핵·생화학 병기의 보유 및 개발상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대상국과 다음 연도의 ODA 규모 등을 상의하는 연차협약에서 NPT 미가맹 문제를 제기한다, ② 적극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ODA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③ 그 후에도 여전히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삭감한다 등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가맹을 재촉한다는 것이다.

의사도 없으며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핵문제를 제기한다면 남(한국)에 존재하는 미국의 핵무기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 입장은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²⁰⁾

이렇게 해서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핵문제라는 걸림돌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한소수교 등 불리한 주변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유지(생존전략)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선택한 전략이 북일 관계정상화였는데 일본이 북일 2국간 관계에 핵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소련을 통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고 나아가 NPT 가입문제를 ODA 제공조건으로 삼음으로서 ODA를 전략적으로 핵문제와 연계시켰던 것이다.

이런 환경들은 북한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북한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룸으로서 경제지원을 끌어내려 했는데 핵문제를 구실로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미국은 한일을 이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개방정책은 곧 북한을 고립으로 몰아 넣었고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남북간 경제격차는 커져만 갔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은 1991년 5월 30일 핵사찰에 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IAEA에 표명한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5月 30日 1面).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자세 전환이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본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동시에 다각적인 자구노력도 강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4. 제약 하에서의 성과: 조건에의 합의와 타협

중국은 1991년 6월 30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다(『朝日新聞』夕刊, 1991年 6月 3日 1面). 그 후 북한은 안전조치 협정체결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핵사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자세였기에 IAEA 이사국은 북한을 주시하게 된다(『朝日新聞』夕刊, 1991年 6月 14日 1面). 반면 이때 한미는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7月 3日 7面). 소련과 중국도 변화를 모색했고 중소(中蘇)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소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의 사회주의 건설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① 북일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은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북일관계를 원만히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북한

20) 衆議院, 外務委員會 120-11, p.16 (谷野政府委員, 1991. 4. 24).

21) 衆議院, 外務委員會 121-2, p.12 (谷野政府委員, 1991. 8. 30).

측의 평가도 일본측의 대응이 대단히 성의가 있으며 정상화를 향해 의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²²⁾ 이와 같이 북일간에 난관(핵문제, 2국간 문제)은 있었지만 지역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유연한 태도를 취했음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9월이 되어 북한은 IAEA 이사회에서 주한 미군의 핵철거 등을 요구하며 IAEA 안전조치 협정조인을 거부했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9月 13日 1面).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9월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핵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고 북한은 1991년 9월 27일의 부시 대통령 제안(전술핵의 철거 및 해체)을 환영하면서 미국 관리 하의 한국 핵무기²³⁾ 철수 및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의 보장이 있으면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북한이 조건부로 안전조치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11월 제5회 북일교섭에서도 일본은 협정의 조기·무조건 체결 및 핵사찰의 완전이행을 강력히 북한측에 요구했다.²⁴⁾

이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에 관해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가이후(海部)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문제가 논의되었다.²⁵⁾ 이어 11월에는 노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²⁶⁾을 발표하기에 이르자 북한은 한국에 있는 핵무기 철거를 조건으로 핵사찰 협정서명 입장을 발표했다. 12월에는 남북간 제5회 고위급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가 조인됨에 따라 핵문제의 연내협조에 합의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에 이어 북한은 핵사찰 안전조치 협정조인을 발표했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12月 13日 2面; 1992年 1月 31日 1面). 이와 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IAEA에 맡겨지게 되니 북일관계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상화를 향한 일보를 내딛게 된다.

22) 衆議院, 外務委員會 121-2, p.7 (柳井俊二政府委員, 1991. 9. 5). 同じ p.10 (谷野政府委員, 1991. 9. 5).

23)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미 육군의 란스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2기, 155밀리 자주포 48문, 동 건인포와 8인치 자주포 각 24문.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F16 대지(對地) 공격기가 군산에 48기, 오산에 24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윌리엄 야킨과 로버트 노리스는 한국에 핵포탄 49발, 핵폭탄 60발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여기에 핵포탄을 30발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朝日新聞』朝刊, 1991年 11月 26日 5面).

24) 衆議院, 外務委員會 121-3, p.2 (谷野政府委員, 1991. 10. 2).

25) 衆議院, 外務委員會 121-2, p.11 (谷野政府委員, 1991. 9. 5).

26) 남북의 핵문제에 관해서 31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의 골자는 ① 핵무기의 실험·제조·생산·수입·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는다, ②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③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④ 검증은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⑤ 공동선언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등이다.

III. 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세

1. 안보인식의 변화와 기회로의 전이: 한·미·일의 공세

한미의 한반도 비핵화공세에 대해 북한도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이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가 증대되면 북한의 개방이 앞당겨지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완화와 러시아 공화국, 중국, 남북한, 일본 등을 포함한 이 지역의 새로운 협력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정부도 IAEA에 의한 사찰이 행하여져 북한의 핵의혹이 사라지면 북일교섭도 큰 진전을 볼 것으로 생각했다.²⁷⁾ 그런데 한국의 핵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즉 한국의 핵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미국이니 한국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남북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

“한반도 핵문제는 원래 미국이 남조선(한국)에 핵무기를 들여오며 따라 생긴 문제이다. 우리 공화국은 비핵국가로서 한반도를 비핵지대·평화지대로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핵사찰 문제도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핵사찰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인류생존에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인 핵 대국(미국)이 선두에 서서 비핵국가인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4月 2日 6面). 이 논리로 본다면 북한의 핵의혹도 문제이지만 미국이 관리하는 남한에 있는 핵도 문제가 된다. 남북대표의 비핵화 선언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시기가 되어 북일교섭도 6회째가 끝나고 북일간 해결과제가 1)기본적인 문제(장래성), 2)경제적 제문제(과거의 청산), 3)국제 문제(핵문제), 4)쌍방의 관심사(일본인 납치의혹 등) 등 네 가지 사항으로 정리되었다.²⁸⁾ 핵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는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²⁹⁾ 또한 북핵문제는 IAEA에 맡긴다는 자세였던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1992년 4월 14일 일본 기자단에게 국제적인 핵의혹의 초점이 되었던 영변의 핵시설 상황을 기록한 필름을 공개했다. 문제가 되었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나 핵연료 가공공장은 비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국방연구원은 화면에 순간적으로 비친 방사능 방호실을 지적하면서 재처리 작업에 필요한 이 시설이야말로 “북이 재처리 준비를 하고 있는

27) 參議院, 外務委員會 123-2, p.8 (谷野政府委員, 1992. 3. 26).

28) 參議院, 外務委員會 123-3, p.4 (谷野政府委員, 1992. 4. 7).

29) 參議院, 外務委員會 123-7, p.12 (谷野政府委員, 1992. 4. 22).

증거"라고 지적했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4月 24日 5面). 북한 원자력 공업성은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그 간의 경위를 설명했는데 미리 보고된 2 곳의 시설과 가동·건설 중인 원자로 3기 이외에 사찰대상 및 비대상을 포함하여 16 곳의 시설을 보고했다. 또한 보통 사후 제출되는 핵시설 설계정보도 동시에 제출되었다. IAEA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고의무가 없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는 매우 협력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朝日新聞』夕刊, 1992年 5月 6日 1面).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일본이나 IAEA 모두 불만이 없었다. 문제는 한국이 제기한 시설이 정말 재처리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화면에 비친 영상인데다가 북한과 IAEA관계에서 보면 논의의 대상이었다.

제7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은 IAEA에 의한 사찰이행과 국제사회의 우려 불식을 북한에 요청했다. 또한 북한에 재처리 시설이 있다는 코멘트가 한미측에서 제기되었는데 일본은 이를 의문시하면서도 IAEA에 의한 사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다.³⁰⁾ 반면 교섭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측이 남북 상호사찰 실현을 북한에 요청한 것이었다. 일본은 “남북은 남북 상호사찰 및 핵재처리 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착실히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이삼로(李三魯) 대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IAEA 사찰을 믿기 어려우니 남북사찰도 해야한다고 주장해 결국 일본은 조건을 덧붙였다”고 반발했다. 지금까지 긍정적이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일본이 남북 상호사찰을 들어 북한의 핵의혹 해소 이전에는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측은 청구권 범위 내에서라면 검토에 응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청구권 범위 내에서만 대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5月 16日 2面). 이때부터 일본 자세가 공세적으로 변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에는 IAEA 사찰이 진행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시킨 이라크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진다. 더불어 미일관계의 새로운 위상변화도 일본의 태도를 보다 공세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위상변화란 미일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표명이며 일본 스스로가 “지역안정을 위해 적극적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표명이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은 정치와 군사문제의 분리해석이며 이는 미일간 역할분담을 의미했다. 미국은 미군 주둔을 통해 군사적 안전보장 역할을 일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외교를 통한 정치적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³¹⁾ 여기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외교가 제약 하에서 기회로의 전이라는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물론 군사적 미일동맹이라는 틀을 중시하면서 일본 역할의 정치적 역할 확대라는 변화의 시도였다. 이는 미일간의 탈냉전기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주도의 IAEA에 일임할 것은 하면서도 한국과의 상호사찰(미

30) 参議院, 外務委員会 123-9, pp.5-6 (谷野政府委員, 1992. 5. 14).

31) 参議院, 外務委員会 123-9, p.6 (佐藤政府委員, 1992. 5. 6).

일에 의한 사찰효과가 기대됨)을 북한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의 배경에는 한미일간 정부 차원에서의 비밀협약이 있었을 개연성도 높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압력이며 일본의 공세였다. 이 단계에 이르러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역할분담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독자적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미국은 상대적 유연성을 일본은 상대적 공세를 취하게 된다. 즉 미국은 군사적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상대적 유연성”을 일본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적 공세”의 임무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이름하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IAEA에 의한 사찰효과(미일동맹 중시, 세계군사전략에의 파트너십)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남북상호 사찰(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안보 및 정치적 역할 강화)에 기대를 걸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핵문제에 대한 미일의 역할분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게 북핵문제는 일관되게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문제였으나 일본에게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방위의 문제로 인식된 때문이었다.³²⁾ 여기서 북핵문제에 관한 초기의 미일간 정합성은 미일동맹이라는 정치군사적인 두 측면에서의 통일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이 단계에 이르러 미일간 정합성은 역할분담에 따른 전략적 정합성이었다. 즉 북핵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일간 정합성과 지역레벨에서의 미일간 전략적 정합성을 산출했다.

2. 기회의 대가: 북의 탈퇴와 북일관계의 교착

제8회 북일교섭에서 일본은 IAEA에 의한 사찰이나 한국과 북한의 상호사찰을 통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정상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했다. 핵문제를 이유로 북일교섭에 소극적인 일본의 자세에 북한은 북일회담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인위적인 난관을 만들어 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북한도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 고민 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8月 2日 2面). 그러나 IAEA에 의한 특별사찰이 끝났을 뿐이고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남북 상호사찰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주장에도 설득력은 없었다. IAEA 사찰은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일본도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만 남북 상호사찰은 남북문제로서 일본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한미일 관계를 고려한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일이 공조해서 북한을 궁지로 모는 결과가 됨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공세로 나온 것은 위에 지적한 일본의 전략적 정합성의 역할을 살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북한은 IAEA 특별사찰로 핵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의한 주한 미군기지의 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IAEA 사찰로서는 불충분하기에 쌍방의 군사기지 사찰을 주장함으로써 맞대응을 했다. 한편 한국은 15일 북한

32) 參議院, 外務委員會 126-1, p.11 (池田維政府委員, 1993. 3. 26).

의 핵의혹 해소없이 구체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9月 16日 6面). 여기서 한국은 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링크시켰다. 이미 일본은 북일 국교 정상화교섭과 남북 상호사찰을 링크시킴으로서 북한과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남북의 비핵화 공동선언(상호사찰)을 착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북일교섭의 조건은 아니지만 국교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중대 문제임을 완곡하게 표현했는데³³⁾ 사실상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은 중국에게 핵문제 해결의 협력을 구했지만 중국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朝日新聞』朝刊, 1992年 9月 29日 1面). 이어 한국은 한미 군사훈련(Team Spirits) 재개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朝日新聞』朝刊, 1993年 1月 27日 6面). 김영삼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했지만(『朝日新聞』朝刊, 1993年 3月 7日 5面), 북한에게 이런 제스처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었다. “북한에는 아직 의문점이 가득 있다. 웬지 개운치 않다.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북한이 의심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데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일본의 불신이였다.³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은 NPT를 탈퇴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해 일본정부는, 탈퇴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에 이 결정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NPT에 남아 있도록 북한측에 호소했다. 또한 22일에는 뉴욕에서 한미일 정부간 협의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탈퇴에 대해 일본정부는, 북한의 설명(T.S. 훈련이 부당하다는 것, IAEA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용했을 뿐 일본정부의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반면 일본이 중시한 것은 한반도에 일본에게 우호적이지 아닌 국가가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일본에게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³⁵⁾ 이후부터 북일관계는 장기휴면에 들어갔다.

IV. 맺음말

일본의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에 대해 일본은 초기(1989-1991)에는 협력적이던 것이 점점 변하여 후기(1992-1993)에는 경직화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했다. 그 배경에는 미일관계의 새로운 위상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위상변화란 미일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표명이며 일본 스스로가 “지역안정을 위해 적극적 외

33) 参議院, 外務委員会 125-1, p.3 (池田維政府委員, 1992. 12. 7).

34) 参議院, 外務委員会 125-1, p.4 (渡辺美智雄外務大臣, 1992. 12. 7).

35) 参議院, 外務委員会 126-1, p.11 (池田維政府委員, 1993. 3. 26).

교”를 구사하겠다는 표명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은 정치와 군사 문제의 분리해석이며 이는 미일간 역할분담을 의미했다. 미국은 미군 주둔을 통해 군사적 안전보장 역할을, 일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외교를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외교는 제약에서 기회로의 전이를 시도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일본은 핵문제를 당사국 문제(국교 정상화와 상호사찰, 남북경협과 핵문제)와 링크시켜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앞으로 북미간 핵문제 해결에 일본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기대한 이상 그에 상응한 일본의 영향력도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고찰대상 시기보다는 앞선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질서를 주도해 왔고 일본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기술 및 자본협조) 후원을 통한 KEDO를 둘러싼 한미일 역할분담을 해오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는 단서일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견인 역할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여하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그만큼 발언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만들기라는 것이다.

일본의 장래 모습을 두고 예단하기에는 더 없이 어려운 문제이나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영속된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브룩스(Stephen G. Brooks) 보다는 월츠(Kenneth N. Waltz)의 견해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유는 월츠(1993: 44-79)의 견해에 따르면 전후 일관해서 경제 중심적인 외교정책을 선택하여 온 일본은 비정상 국가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어 핵무기를 소유하고 미국의 균형세력이 될 것이라 전망했고, 반면 브룩스(1997: 445-477)는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대국으로 되어 미국의 균형세력이 되기보다는 경제대국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군사적 현실주의의 확산과정”으로 파악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는 강한 불신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한의 대외 행위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적대국 의식이 있기에 북핵문제는 일본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웬트(Alexander Wendt, 1995: 71-81)의 지적대로 일본은 핵 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국)보다는 핵 잠재국 북한을 더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관념적이며 사회적인 구조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日本国会, 参議院, 第109回, 外交総合安全保障に関する調査会, 外交軍縮小委員会, 會議録 第1号.
 第118回, 予算委員会, 會議録 第17号.
 第123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2号; 第3号; 第7号; 第9号.
 第125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1号.
 第126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1号.
- 日本国会, 衆議院, 第112回, 内閣委員会, 會議録 第13号.
 第114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2号; 第3号.
 第118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7号; 第9号; 第12号.
 第120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7号; 第11号.
 第121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2号; 第3号.
 第123回, 外務委員会, 會議録 第9号.
- 日本防衛庁, 『防衛白書』, 1988年版; 1990年版.
 『朝日新聞』
- 김봉진. 1993. 「북일 국교 정상화교섭과 일본의 대응」. 『통일연구논총』 제2집 2호. 민족통일연구원. pp.109-144.
- 김용호. 2000. 「북한의 대외협상 형태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291-310.
- 김재목. 1995. 『북핵협상 드라마』. 서울: 도서출판 경당.
- 양기웅. 1996. 「투-레벨 협상전략: 북일 수교협상」. 『통일연구논총』 제5집 1호. 민족통일연구원. pp.141-188.
- 이교덕. 1995. 「한일 회담으로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문제의 타결전망에 관해서」. 『통일연구논총』 제4집 1호. 민족통일연구원. pp.155-188.
- 이면우. 1999. 「일본의 신안보정책: 국제적 변수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진창수 편.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pp.45-78.
- 이숙중. 1999. 「일본의 탈냉전기 안보여론: 반군사주의와 국제공헌·대미협력론의 조화」. 진창수 편.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pp.79-134.
- 이춘근. 1995. 『북한 핵의 문제—발단, 협상과정,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 정옥남. 1995. 『북핵 588일—클린턴 행정부의 대응과 전략』. 서울: 서울프레스.
- 진창수. 1999(a). 「신안보정책의 정치과정: 군사적 현실주의의 확산」. 진창수 편.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pp.15-43.
- _____ 편. 1999(b).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 최운도. 2000. 「일본 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기회와 의지」.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89-126.
- 허만호. 1996.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국제정치논총』 제

36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pp.179-215.

- Brooks, Stephen G. 1997. "Dueling Realis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3), Summer. http://web7.infotrac.apla.galegroup.com/itw/infomark/18/976/27011213w3/pur1=rcl_EIM_O_A19808577&dyn=13iar_fmt?sw_aep=yun,26 Bar(검색일: 2001. 3. 7).
- Downs, Chuck. 1999.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Washington, D.C.: AEI Press; 송승중 역. 1999.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한울 출판사.
- Mack, Andrew. 1991.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83, Summer.
- Mazarr, Michael J. 1995.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Y.: St. Martin's Press.
- Oberdofer, Don. 1997.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뉴스위크 한국판 뉴스팀 번역. 1998. 『두 개의 코리아』. 서울: 중앙일보사.
- Quinones, C. Kenneth. 2000. *North Korea's Nuclear Threat "off the record" Memories*; 伊豆見元 監修, 山岡邦彦 外譯. 2000. 『北朝鮮—米國務省擔當官の交渉秘録』. 東京: 中央公論新社.
- Sigal, Leon V. 1997. *Disarming Stranger: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구갑우 외 역. 1999.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서울: 사회평론.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Fall.
- _____. 200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박건영 역. 2000. 『국제정치 이론』. 서울: 사회평론.
- Wendt, Alexander. 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20(1), Summer. http://webl.infotrac.apla.galegroup.com/itw/infomark/542/878/27001124w3/pur1=rcl_EIM_O_A18253713&dyn=23!zm_147_0_A18253713?sw_aep=yun,1-3/11Bar(검색일: 2001. 3. 7).

Transit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in Post-Cold War Era: Viewed from North Korean Nuclear Controversy, 1989-1993

Park Hong-young

*Instruct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o Man-ho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regards its security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initial cooperative position (1989-1991) taken by Japan subsequently transformed into a firm position, resulting from a change in Japan's partnership with the USA. In other words, Japan proclaimed "positive diplomacy for region stability" in the context of a "global partnership" with the USA. The main principle of this global partnership is a separa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between Japan and the USA, respectively. As such, the USA takes charge of military security through its military ba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Japan tries to resolve political questions through positive diplomacy, thereby discarding past constraints and establishing a new position for itself through security diplomacy in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as a result of this policy, Japan recently drove North Korea into a corner by linking the nuclear issue with political questions, for example, diplomatic normalization issues with mutual inspec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uclear issues etc. Therefore, insofar as the USA is calling for a proactive role from Japan as its global partner in East Asia, a corresponding influence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from Japa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A, Japan, and South Korea through KEDO can be analyzed as follows; the USA dominates the East-Asian military order, while Japan takes charge of the politico-economic support. Accordingly, to a certain degree the Japanese role can be interpreted as supporting American world military strategy, while also strengthening Japan's position in East-Asian affairs.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Japan's role i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centering on the USA.

박홍영.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823-6-302호. Tel: 053) 524-1152.

E-mail: phy1156@hotmail.com

허만호.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번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Tel: 053) 950-5213.

E-mail: mhheo@knu.ac.kr